

합리적 개혁주의자, 노무현을 말한다

(어록을 통해 본 노무현의 개혁과 비전)

**‘투명·개방·공정·자율’,
노무현이 말하는 개혁의 4대 원칙입니다.**

노무현이 추구하는 사회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한마디로 ‘합리적인 사회’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원칙이 바로선 사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노무현은 투명·개방·공정·자율의 4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투명성·개방성·공정성·자율성

다시 키워드를 이야기한다면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과 조정’, 우리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느냐? 투명성과 개방성, 공정성과 자율성이 핵심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개인적 비밀로 보호해야 할 사생활을 제외하고, 모든 공적인 거래를 최대한 투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폐쇄된 특수사회가 많습니다. 이것을 해체해야 합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지만 개방적인 사회로 가야 합니다. 또 공정해야 합니다. 사회가 통합되려면 결과에 있어서 균형, 과정에 있어서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자율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적 문화로 가야말로 대대적인 선풍을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자율의 문화를 뿌리내리게 할 것입니다. 물론 5년만에 뿌리 안 내려지지요. 그러나 자율의 문화를 끊임없이 실험해 나가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또 하고 또 하는 겁니다.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 pp80-81, 행복한책읽기 간)

1. 원칙과 신뢰

‘원칙과 신뢰’는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노무현은 무엇보다 기본을 중시합니다. 상식을 우선시합니다. 정의로운 사람들이 승리하는 당당한 역사를 강조합니다. 그는 그 바탕위에서 ‘국민의 정부’ 개혁의 당위성을 평가하고 이를 지지해 왔습니다. 그는 ‘국민의 정부’가 추구해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의 국정운영지표를 계승하고 있으며, 의약분업·국민연금·언론개혁 등 각종 개혁의 정당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원칙과 신뢰

한국은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편법, 뒷거래가 없어야 합니다. 원칙을 바로세우고 규범을 준수하고 모든 약속은 지켜진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이 신뢰사회를 구축하지 않으면 한국은 한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21세기 한국의 시대정신과 지도자” 안동시민학교 특강, 2001·11·8)

민주주의·시장경제·생산적 복지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그러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생산적 복지 정책은 바로 이 시장경제로 말미암아 생기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분열과 갈등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한 사회통합의 정책입니다. 이 생산적 복지가 실패한다면 한국은 또다시 분열해서 싸우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시장경제·남북화해·경제건설 그리고 이 생산적 복지 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노무현과 함께 하는 사람들, 2001무주단합대회” 연설, 2001·11·10)

의약분업 등 개혁

신념이 있는 정치지도자라면 정권의 인기나 안위만을 의식하면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중략)

의약분업 때문에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3년, 5년이 지나면 우리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이것을 보다 성숙된 의료제도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처음에 안전벨트를 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귀찮고 불편했습니까? 하지만 요즘은 차에만 오르면 안전벨트부터 맵니다. 병원을 들어서 약국에 가는 것이 불편하긴 하지만 습관이 되면 별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습관이 되면 훨씬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국민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민주당 청원연수원 특강, 2001·5·12)

언론개혁

이제 정부는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언론에 대해 간섭하지 말고 특혜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을 밝히고 법 적용도 일반시민과 똑같이 해야 합니다.

언론사는 어두운 과거를 스스로 청산하고 정도를 가는 언론으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언론사주는 비리의 실체가 드러난 마당에 국민에게 사죄하고, 기자들에게 언론의 자유를 돌려주든가 아니면 언론사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할 것입니다.

기자들은 숭고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갖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민들은 언론의 편파보도에 매몰되지 않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자기 권리를 찾는 당당한 시민이 돼야 합니다.

정치권은 여론을 수용해서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역사발전을 가로막는 한두 개 수구특권 언론과는 맞서 싸워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사주의 자유가 아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강연, 2001·6·28)

정치개혁

우리 정치를 재편성하기 위해서 (중략) 민주당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탈 호남해야 하고 일인지배체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당권을 분리해서 대통령이 국회를 지배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소신에 따라서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과정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노무현과 함께 하는 사람들, 2001무주단합대회’ 연설, 2001·11·10)

2. 대화와 타협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전까지 이해관계가 다른 사회적 갈등은 권력이 힘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87년 ‘6월 항쟁’ 이후 그런 방법은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직 타협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타협의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회적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노무현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제로 정치의 지역구도 척결, 관용과 상대주의, 대화와 토론 등을 강조합니다.

대화과 타협

87년 민주화투쟁 이후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메커니즘이 변화했습니다. 권위와 권력의 힘으로 갈등을 해결하던 시대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시대로 이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대화와 타협의 사회적 의식과 시스템은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국민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민주당 청원연수원 특강, 2001·5·12)

98년 현대자동차 파업 중재

98년 여름의 현대자동차 파업 사태는 IMF 당시 구조조정의 시금석이었다. 나는 단단히 마음을 먹고는 일주일 분량의 옷가지를 싸들고 울산으로 향했다. 누군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나서서 하겠다는 생각이었다. 농성과 갈등이 장기화되어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더 이상 가만히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 ‘인기를 의식한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 일부에서의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중재에 실패할 경우 내가 뒤집어써야 할 책임과 비난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갈등의 현장이 바로 정치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나의 생각을 바꿔놓지는 못했다. 다행히 중재에 성공했고 분규는 끝났다.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 p144, 행복한책읽기 간)

삼성자동차 매각 협상

삼성자동차의 빅딜이 실패로 끝나면서 부산 경제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던 삼성차의 처리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누군가가 나서서 책임을 지고 매각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면서 공장이 가동되도록 해야 했다. 그게 바로 정치인의 몫이라는 결론을 내린 뒤 청와대와 부산을 오르내리면서 중재에 나섰다.(중략) 당시 일각에서 주장하던 ‘국부유출’의 시비를 없애기 위해 야당 의원들까지 만나 설득도 했다.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 p144, 행복한책읽기 간)

삼성자동차 매각의 성과

삼성자동차를 매각할 당시 매각감정가는 1조2천억이었으나 결국은 르노가 제시한 4,500억 원에 매각되었습니다. 1,700억 원은 현찰이고 나머지는 이익이 남으면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삼성자동차는 고용인원이 당시보다 919명이 증가했고 4,400억 원 규모의 신규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희망이 있는 국민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민주당 청원연수원 특강, 2001·5·12)

대우자동차 파업의 현장에서

2001년의 대우자동차, GM과의 협상이 이야기만 무성할 뿐 실제로 진전되는 사안은 없는 상태에서 대우자동차의 처리 문제가 심각한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경찰과 노조 사이의 우발적인 충돌로 사태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다. 그때 인천 출신 의원 등의 요청으로 삼성차의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다.

사례발표를 마치고 난 뒤 노조사무실을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노조 관계자들에게 대우자동차의 정상가동과 합리적 매각을 위해 대국적인 자세를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그때 나를 향해 계란이 날아들었다. 나는 그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 p145, 행복한책읽기 간)

3. 통합과 화해

노무현은 통합의 정치인입니다. 1988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래 분열되어 있던 야당의 통합을 위해 노력했고, 90년 ‘3당 합당’ 이후에는 마침내 야권의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노무현은 동서통합을 이루기 위해, 망국적인 지역갈등과 싸워왔습니다. 그는 동서통합, 노사화합 등 사회통합이 전제되어야 정치의 정책구도가 복원되고 진정한 의미의 개혁이 완성됨을 역설해왔습니다.

분열이 망친 정치

세계 어느 나라 중에서도 나라가 서로 갈라져서 반목하고 불신하고 싸웠던 역사치고 후손들에게 엄청난 불행을 남겨주지 않았던 역사는 없습니다.(중략)

분열 때문입니다. 분열 때문에 3당 합당이라는 일이 일어났고 3당 합당 때문에 정치구도는 이념과 역사를 떠나서 오로지 지역만에 의해서 투표하는 지역구도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니다. 이 지역구도 속에서 옳고 그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책의 효율성과 정당성이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지역만이 있을 뿐입니다. 똑같은 정책도 지역을 따라 지지를 달리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노무현과 함께 하는 사람들, 2001무주단합대회’ 연설, 2001·11·10)

노사화합과 노사정위원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선 직후 바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당장 노동자들로부터 IMF가 요구한 정리해고제를 받아내야 하는 절박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노사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이었습니다. 제1차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그것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져도 좋을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대결과 투쟁의 시대를 마감하고’ 제105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1999·7·7)

영·호남이 함께 웃는 대통령선거

나는 다시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 개표일의 풍경을 꿈꾸고 있다. 그 날에는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밝은 함성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다. 더 이상 한 곳은 웃고 다른 한 곳은 우울한 그런 풍경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축하객들이 만면에 웃음을 하나 가득 머금고 경부선으로 또 호남선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현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노무현, 상식 혹은 희망’ pp147-148, 행복한책읽기 간)

남북화해의 길

남북화해를 성공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고, 그 평화를 기초로 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질서를 만들어내고, 1억의 내수시장과 7억의 국제시장을 만들어내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완성시키고, 동북아시아 평화의 질서 위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해나가는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남북화해와 협력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내야 합니다.

(‘노무현과 함께 하는 사람들, 2001무주단합대회’ 연설, 2001·11·10)

4. 중산층과 서민

노무현은 정치 입문 전에는 인권과 민권을 변론하는 인권변호사로, 초선 의원 시절에는 당시 열악한 위치에 있던 노동자와 서민의 벗으로, 그리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노사화합의 중재자, 사회갈등의 조정자로 나서 다양한 요구들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인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 정강정책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 문제에 개입 말아야

경기 문제에 관한 한 정부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경기 순환은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국민들은 정치인을 먼저 비판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경기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시장의 원리에도 위반되는 대증요법(對症療法)을 쓰게 됩니다. 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인위적인 증시안정정책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정치가 경기 문제에 대해 개입하는 일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희망이 있는 국민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민주당 청원연수원 특강, 2001·5·12)

재벌개혁

재벌개혁 없이는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또 다시 재벌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재벌개혁을 뒤로 되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막지 못하면 역사는 거꾸로 가게 됩니다. 막지 못하면 이 사회는 가진 자들만을 위한 사회가 되고 중산층과 서민들은 설 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과 함께 하는 사람들, 2001무주단합대회’ 연설, 2001·11·10)

분배의 문제

시장경제, 4대 부문 개혁, 세계화라는 말속에는 작은 정부,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시행했을 때 빈부격차가 심해지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침체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분배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산적 복지 정책이 나온 것입니다. 지속적인 수요창출을 위한 분배가 필요합니다.

(‘가치문화의 시대를 열자’,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특강, 2001·10·25)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불가피한 일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세계화된 경제체제 하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스페인의 곤잘레스 수상 시절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실업률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국민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민주당 청원연수원 특강, 2001·5·12)

5.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

국민의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면서 노무현의 새로운 리더십이 주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장관이 직접 부하의 책상을 찾아가 그 자리에서 회의를 하는 가 하면 일방적 지시는 쌍방향 대화로 대체되었습니다. 낮은 자세로 대화하는 노무현의 리더십은 변화의 새 시대를 이끌어갈 탁월한 리더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리더십

꿈이 역사를 만듭니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는 무렵, 콘래드 아테나워라는 젊은이가 독일 북부의 작은 교회에서 '유럽은 하나로 합쳐야 한다'라는 자신의 꿈을 주제로 연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그 이후 1952년 서독의 수상이 됩니다. 수상이 되면서부터 구주석탄동맹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이 발전하여 구주공동시장이 되었고 현재는 단일 통화까지 사용할 정도로 유럽이 통합되었습니다.

(‘21세기 한국정치의 과제와 전망’, 팩스코리아나 21 포럼, 1999·9·29)

친구 같은 대통령

저 높이높은 청와대 담장 안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대통령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대통령이 탄생할 겁니다. 때로는 경호원 없이 동대구 시장에 부산 시장에 불쑥 나타나는 지도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소주 한잔을 나누게 될지도 모릅니다.

(‘노무현과 함께 하는 사람들, 2001무주단합대회’ 연설, 2001·11·10)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

나는 감히 말한다. '역경 속에서 연마한 건전한 상식'을 가진 링컨이 없었다면 미국의 정치사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낮은 사람이,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든 전형을 창출한 사람, 그가 곧 링컨이다. 그는 옳은 길을 갔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길을 가 성공했기에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옳지 못한 길을 가야하고, 정직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그릇된 관념이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의식, 이러한 문화를 바꾸지 않고서는 한 차원 높은 사회발전도, 역사발전도 불가능하다. 이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인간의 자존심이 활짝 피는 사회, 원칙이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자 정치를 하는 이유이다.

(‘노무현이 만난 링컨’, pp15-16, 학교재 간)